

# 사설

## 대선정국과 불교계

대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이 발표되고, 후보들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라벨트가 철회되어, 땅값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불교계에도 서서히 대선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표발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이 불교계의 지도자들을 방문하는가 하면, 전국사찰과 신행단체 등의 법회장에도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정치인들이 불교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불교계가 경험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권에 휘말려서 본래의 부처님정신을 잃고 굴절되었던 적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할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중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위해 국민전체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우리 불교계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가 종교로서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 지난 94년 3월 개혁불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해도 역대정권은 불교계를 단연히 여당의 표밭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에서 사부대중의 힘이 모여 각계각층의 불교사회단체가 결성되고 대사회적인 역할이 증진됨으로써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많은 불교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각성과 비판의 눈으로 정치계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전술전략이나 당리당략적 공세에도 휩쓸리지 않고 부처님정신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의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대통령뽑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불교가 순수한 종교적 위치를 지킨다 하더라도 역사와 사회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계도할 도덕적 의무가 부여된다. 대통령책임제를 정치체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운이 좌우된다.

또한 불교계의 발전과 불교중흥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지난 역대정권의 종교정책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미 정치가 가정의 부역살림까지 파고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문민정부를 자칭한 현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치권력에 의해 우리 불교계가 적지 않은 탄압을 받아왔음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체불사건, 대통령 국방부에 배사건, 교과서 왜곡사건,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각종 불교차별적 편향정책으로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불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아직도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불교문화재들이 부처님정신에 의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국가 권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른 대통령 뽑기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셋째, 불교계가 합심하여, "정치권이 불심을 분열시킨다"는 식으로 불교계의 선거바람을 때려쳐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의 권력지향적인 외부적 작업에 대해 불교계는 더욱 단결하여 기분정신인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존중하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을 비롯하여 정치권에 당부하고자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인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존중하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대선후보들의 사찰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제 前경기자사는 9월30일 월하스님을 예방, 환담했으며(사진 왼쪽) 지민련 김종필총재도 1일 월하스님을 친견한 후 부산 삼광사 법회에 참석했다(사진 가운데). 조순 민주당총재는 9월28일 대행스님 초청 부산대법회에 참석, 인사말을 했다.



○대선후보들의 사찰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제 前경기자사는 9월30일 월하스님을 예방, 환담했으며(사진 왼쪽) 지민련 김종필총재도 1일 월하스님을 친견한 후 부산 삼광사 법회에 참석했다(사진 가운데). 조순 민주당총재는 9월28일 대행스님 초청 부산대법회에 참석, 인사말을 했다.



○대선후보들의 사찰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제 前경기자사는 9월30일 월하스님을 예방, 환담했으며(사진 왼쪽) 지민련 김종필총재도 1일 월하스님을 친견한 후 부산 삼광사 법회에 참석했다(사진 가운데). 조순 민주당총재는 9월28일 대행스님 초청 부산대법회에 참석, 인사말을 했다.

# 대선후보들, 불심구애 '바쁜 걸음'

## 월하스님 예방 필수코스... 불교행사마다 얼굴알리기

대선후보들의 '불심 잡기' 경쟁이 뜨겁다. 각 후보들은 9월 30일을 전후한 영남지역 방문기간 동안 경쟁적으로 월하 조계종 종정스님을 예방하는 등 '불심 잡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5일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친견하는 등 그간 불교계와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회창후보의 부인 한인옥씨도 지난 9월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친견하는 등 사찰을 연달아 방문했고, 2일에는 범어사를 방문했다.

김대중 국회의 총재는 5일

동화사 방문을 시작으로 통도사 등 유력 사찰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당내 불자위원 모임인 연동회(회장 박상규의원)는 최근 홍보지 <새정치 포럼> 25호에 '큰 뜻 이루소서'란 주제로 불교 특집호를 제작 배포했다.

김종필 지민련 총재는 1일 통도사와 부산 천태종 삼광사를 잇달아 방문해 법회 등에 참석하면서 불심 잡기를 통한 지지기반 확충에 주력했다. 김총재는 월하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요즘은 언론사 토론 위주로 선거운동이 진행돼 정신적으로 더 긴장된다"고 말했으며, 월하스

님은 "일부러 찾아주어 고맙다"고 화답했다.

9월 28일 부산을 방문한 조순 민주당 총재는 2박3일간의 부산 일정을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초청 부산대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법회 참석을 위해 부산 일정을 하루 앞당기는 등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불교행사에 공식 참석함으로써 본격적인 불심잡기에 나섰다.

이인제 前경기자사는 부산 MBC초청 TV토론회 준비와 시장방문 등 시간을 쪼개 한 바쁜 일정에도 "통도사 방문만은 차질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인제후보는 9월30일 오전 통도사를 방문 월하스님에게 삼배로 인사를

올리고, 10여분 정도 자신의 아내 김은숙씨가 불자라는 것과 동향이라는 점을 들려 환담했다. 월하스님은 '인화년풍(人和年豊)' '민화안국(民和安國)'이란 휘호 두 점을 전달하고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 계율 수정보완 '불가' 조계종 계단위 공고

조계종계단위원회(위원장 청하)가 그간 중단내에서 거론된 계율 수정·보완 논의에 대해 '더이상의 논의 없기를 바란다'고 해기를 밝혔다. 위원회는 9월3일 개최된 회의 내용을 최근 공고했다. 위원회

## "전·노씨 사면해야" 월주스님, 시사지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주간 시사지 <뉴스메이커> 최근호(10월2일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사면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이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낫고 처벌을 받았으므로 사면절차를 받아야 한다. 그 시기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 공고는 △계율제정은 율장과 경전에 기록된 바 없고 △재제정 논의의 경장·논장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변 부정하는 일이다 △개척과 방편을 자의로 해석하는 경향은 부처님의 참뜻을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 日스님·청년불자 연내 방북

### 北어린이 식량 전달

일본의 스님과 청년불자들이 북한의 어린이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북단에는 통역자격으로 리선행법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감사)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북해도지역 청년회는 9월25일 삿포로 시니 게이요프라자 호텔에서 '붉고 있는 북한어린이 돕기 식량도금대법회'를 열고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동종 삿포로교구장 요시다스님 약천사 주지 다

나가 고오인스님 참의원 다카키 마사야카의원 도희 노무라 요시즈루의원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국제청년회(회장 다나카 세이젠)의 간부도 방북단이 구성돼 추진되고 있는 북돋기 운동에 대해 회장 다나카스님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등을 초월한 부처님 자비사상의 실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어린이 돕기운동으로 모인 성금은 쌀과 국수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방북에 앞서 북해도 지역 청년회 간부들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관문점을 방문 시찰한다.

## 종단협 인권위 '활동' 위원장에 해공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종단협 사무실에서 인권위원회 현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인권위원회 운영은 태고종이 맡게 되며, 위

원장에는 태고종 재무부장 해공스님이 내정됐다.

인권위는 매일 인권법회를 개최하고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및 배상 추진, 인권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 '97 국정감사 불교관련 정부답변 요약

### 제185회 정기국회 상임

위원회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1~18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불교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부답변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 문체공위

▲석굴암 보존대책=대한건축학회의 석굴암 구조안전진단결과 구조상 문제는 없다. 다만 공조시설 및 송풍관의 소음과 진동의 영향과 미세한 누수 및 균열이 우려됨에 대해 보수지침과 기계시설교체를 경북도에 시달렸다. 불국사측에 의해 제2석굴암 건립계획이 공식요청되면 관계기관 및 학계 종교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나가겠다.

▲사찰문화재 도난실태 및 방지대책=사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현재 8개사찰에 1백20여원을 투입, 유물전시

관을 건립중이며 동화사 등 4개사찰에 대한 유물관립을 계획하고 있다. 보호관리가 어려운 개인사찰이나 말사소유의 문화재는 국·공립 박물관에 위탁보관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에관리인 및 자매결연단체를 활용,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검·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사찰문화재 도난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겠다.

▲북한문화재 외부반출=통일을 대비 1984년부터 북한 소재 문화재를 조사, 현재 슬라이트 등 6천2백99건의 자료가 수집돼 앞으로 북한문화재의 수입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이 동시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민간 차원의 북한문화재 수입을 고미술협회를 통해 파악,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

겠다.

### 외무동일위

▲해외우리 문화재 훼손=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유출 경위가 명확한 국·공립소장 문화재는 외교통로를 통해 환수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출경로가 불명확해 환수가 곤란한 문화재는 소재국 박물관에 한국관을 설치 및 확대를 추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차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사찰환경=사찰환경보호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에 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자연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각 시·도에 지침을 하달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토록 하겠다. 조례제정시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전달하겠다.

현대만평 부구원

# 현대만평



아름다운 우리말 많이 쓰자구요

737-8881

# 국립·도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돼야 합니다

## —최근 사태에 대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의 입장—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는 제6차 회의를 제주 관음사에서 갖고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로 인한 갈등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듣고 토론했었다. 국립공원 관리소속이 내무부 부속기관으로서 내무부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약속한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를 통합집수한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분리징수를 요구하며 사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한 심한 우려를 함께 했다.

정부는 국립공원지역을 설정할 당시 강제로 사찰소유입자를 편입시키면서 입장료 30%지급의 약속도 무시하였다. 근래에 와서 10년간 공원입장료를 인상시키면서 사찰문화재관람료는 동결시켜 오던 차 96년 여름에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립공원 관람료 사찰에 요금인상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국립공원 관람료사찰에서는 관람료위원회를 결성, 작년과 금년에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작년과 금년에 또다시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호 하여금 공원관람료사찰의 문화재관람료징수를 합동으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일반인론에 마치 사찰이 큰 잘못이나 있는양 왜곡보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급기야 근자에 사찰과 관리소에 분리징수를 강요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어 사찰운영과 문화재보호에 큰 손해를 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국립공원에서 막대한 입장료(주차비 3,000원, 입장료 1,000원)를 받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그것도 남의 땅(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아 공원관리공단의 인적물적관련

모든 운영경비를 지출하며 관리공단 입장료의 절반(주차비 포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두고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 사찰 길들이기나 하는냥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정부부처와 불교계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향락·유희적인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천년고찰 수행도량의 환경파괴는 물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들도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 — 결의 사항 —

1. 문화재보호법 적용사찰 및 입자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하여 불교 자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람료 징수 사찰에서의 공원 입장료 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원 관리 준비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여 국민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라.
3. 1997년 9월 22일에 발표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위와같은 결의가 실행되고 관철되도록 우리는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도 교구연합으로 결의대회를 거친 뒤 다시 중앙에서 전국규모의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 있는 조계종 사찰에 가해지는 모든 문제가 정부의 편향과 무지한 종교정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적절차까지도 강구하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9월 23일

#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 일동